

일본의 한국병합 100년 한일관계의 과제와 전망: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갈등의 해결방안과 협력의 전망

전진호 (광운대학교 교수)

한일은 21세기 새로운 협력관계를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21세기를 20세기와 같은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협력을 만들어 가는 신시대로 열어가야 할 것인가는 향후 몇 년 간의 한일관계의 재정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1세기 한일관계를 열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는 한일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담론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양국은 미래담론의 공유를 통해 함께 이익을 나누고, 함께 만들어 가는 21세기 양국 협력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일관계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시켜야 하며, 양국 간의 2국 간 협력을 지역협력 및 국제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 대상의 발굴도 필요하다.

목 차

1. 서론: 21세기 한일협력의 방향
2.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의 현황 및 문제점
 - 가. 기존의 한일 2국 간 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
 - 나. 한일이 지향해야 할 2국 간 협력방향의 제시
3. 21세기 한일협력의 방향
 - 가. 한일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담론의 구축
 - 나. 중단기적인 한일 2국 간 협력방안 모색
 - 다.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실천적 협력
 - 라. 한일협력을 통한 국제협력의 모색
 - 마. 기타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4. 결론: 협력의 전망

1. 서론: 21세기 한일협력의 방향

- 2010년은 일본의 한국병합 100년이 되는 해이며, 한일국교정상화 45주년임. 한일 양국은 지난 반세기에 걸친 협력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열어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음.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협력의 기반 위에 있으나, 한일협력의 새로운 장(場)을 열어갈 협력의 패러다임을 찾지 못하여, 제한적이고 현상유지적인 협력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지 못함.
- 21세기 한일 양국은 양국 간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한일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을 요구받고 있음. 한일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한일관계의 기존의 틀을 깨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내용과 방향이어야 함.
- 현재의 한일협력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1998년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¹⁾을 향후도 구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한일관계의 변화에 따른 중요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런 점에서 21세기 한일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과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임.
 - 한일이 공유할 수 있는 21세기 미래담론의 설정을 통한 협력의 제도화
 - : 21세기 한일관계를 상징하고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한일 간의 미래담론의 설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한일 양국은 한일협력을 미래담론의 공유에서 시작하여 협력의 제도화로 구체화시켜야 함.
 - 한일 간의 2국 간 협력을 통한 국제협력의 모색
 - : 한일협력이 한일의 2국 간 협력에 거치지 않고 한미일, 한중일, 혹은 다국간 국제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및 협력 대상의 발굴이 중요하며, 또한 21세기 한일협력은 지역협력, 국제협력을 시야에 둔 한일협력으로 재설정되어야 함.
 - 실질적인 한일 2국 간 협력 증진방안의 모색
 - : 한일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대상의 발굴 및 협력관계의 창출이 중요하며, 기존 협력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협력을 전제로 한일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야 함.

2.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기존의 한일 2국 간 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

- 198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이 양국 간에 합의된 이후 한일 간에는 새로운 협력의 프레임워크가 합의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고이즈미, 아베, 아소 정권을 거치면서 양국의 협력관계는 기존의 협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후퇴한 것이 사실임.
- 또한 기존의 한일협력은 현안문제대응 위주의 제한적 협력관계라고 평가할 수 있음. 즉, 기존의 한일 관계는 양국 간의 현안문제의 해결에는 기여하나, 장기적 한일 관계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음. 따라서 한일 간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한일관계를 보면, 역사/영토문제 등 민족 국가적 문제에 한일관계가 종속되는 경향이 강함. 즉, 현재의 한일관계는 다양한 분야가 상호 협력하면서 발전하는 구조가 아니라, 역사/영토문제 등 민족 국가적 문제가 타 분야를 압도하는 상황임. 따라서 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가 독립적으로 발전하며 협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확립이 요구됨.²⁾
- 기존의 한일협력의 대부분이 2국 간 협력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한일 협력이 2국 간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21세기적 국제환경에 걸맞게 2국 간 협력을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함.
- 김대중 정부까지 양국이 구축해 온 정부 간, 민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와해되어, 양국 간에 현안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수면 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와해된 상태임. 정부 간 레벨의 논의와 함께 수면 하에서 문제해결을 주도해 온 양국 간의 인적 네트워크의 와해는 양국 간의 갈등과 대립의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양국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재건하는 노력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기존의 한일 관계는 양국 간의 현안문제의 해결에는 기여하나, 장기적 한일 관계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고 따라서 한일 간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할 방안이 필요함

한일 협력이 미래를
향해 같이 나아가는
협력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의 전체
틀과 이에 연동하는
세부협력의 조정이
매우 중요함

나. 한일이 지향해야 할 2국 간 협력방향의 제시

- 한일 협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21세기 한일이 처한 국제적 환경 및 한일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비전에 입각한 다양한 2국 간 협력과제의 개발이 필요함.
- 기존의 협력 분야를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협력분야의 모색과 실천을 통해 21세기 한일 협력의 방향성을 정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협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협력의 제도화가 요구됨.³⁾
- 기존의 한일협력이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개별적으로 증진해 왔다면, 21세기 한일협력은 양국 간 협력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양국 간 협력의 큰 틀 아래에서 각 분야별 협력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이는 개별사안에 대한 협력의 수준을 넘어, 양국이 21세기에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고 새로운 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
- 한일 협력이 임기응변식 대응에서 미래를 향해 같이 나아가는 협력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의 전체 틀과 이에 연동하는 세부협력의 조정이 매우 중요함.

3. 21세기 한일협력의 방향

가. 한일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담론의 구축

1) 21세기 한일 미래담론의 공동 천명

- 한일 양국이 21세기를 공유할 수 있는 양국 간의 미래담론의 구축과 실천이 요청되며, 새로운 미래담론은 기존의 한일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함.
- 미래담론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을 계승, 발전시키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가 동시에 참여, 공유할 수 있는 담론의 형태이어야 할 것임.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담론의 모색이 필요함.

- 먼저, 환경 및 자원담론(환경, 에너지, 에코 등)이 21세기 한일 미래담론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이 이미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거나, 혹은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환경 및 자원 분야이며, 따라서 21세기 한일 미래담론의 중심적인 부분으로 환경, 에너지, 에코 등을 전략적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으로 21세기 한일 미래담론은 양국 국민이 중층적이고 복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하여야 함. 양국 국민들이 한국, 일본 국민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임.
- 한중일 3국은 민족주의적,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한 국가이며, 따라서 한일 양국이 이러한 갈등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한일 양국이 중장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공동체에는 경제공동체, 통화공동체, 역사문화공동체, 환경 및 에너지공동체, 안보공동체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한일 환경, 문화, 경제공동체 구상이 비교적 현실적이며, 환경-문화-경제 공동체의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지막으로 21세기 한일협력은 현실적인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협력의 형태가 되어야 함. 앞에서 제안한 내용의 협력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미래담론으로 제시하고, 정부 간 협의를 개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만약 가능하다면, 2010년에 양국 정부의 공동성명의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 적절함.⁴⁾

2) 한일 간의 장애요인의 관리, 갈등해소 방안의 공유

- 21세기 한일의 미래담론에는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문제, 독도문제, 북한문제 등의 양국 간의 장애요인을 관리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⁵⁾
- 먼저, 미래담론의 공유 및 실현을 위해서는 과거사 및 역사인식 등의 양국 간의 갈등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며, 양국 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의 확보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재구축

*21세기 한일 미래담론의
중심적인 부분은 환경,
에너지, 에코 등을
전략적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협력의
형태가 되어야 함*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대처는 '한국 대 일본'이라는 국가 간의 대결구조보다 '일본의 보수, 우경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함으로서 이러한 갈등요인을 관리해야 함.

-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대처는 '한국 대 일본'이라는 국가 간의 대결구조보다 '일본의 보수, 우경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본사회의 건전한 시민세력, 진보적 지식인은 물론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국가, 세력과 연대하여 일본 내의 우익, 보수진영을 압박해 나가는 방법이 효과적임.
-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가 불러올 수 있는 양국 간의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이 문제들을 그냥 묻어두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님. 이는 향후 일본이 같은 문제를 재발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발생을 억제하며, 발생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수습하는 접근이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임.
-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군사적 보통국가화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군사적 보통국가화는 일본의 21세기 국가전략인 것을 전제로 대일 전략을 수립해야 함.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크게는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또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긴장조성이나 군비확장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일 설득을 병행해야 함.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관련 당사국의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신뢰를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함.
- 일본의 군사화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안전보장 기구를 활용하여, 아세안지역포럼(ARF)이나 ASEAN+3 확대정상회담 등에서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한 군사협력, 정보공개, 상호방문 등을 의제로 상정하여 각 국의 군사정보의 교환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함.
- 세 번째로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역사교과서 등에 의한 독도문제 쟁점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의 발생을 억제하고 관

리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함. 독도문제를 영토문제로 접근하면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영토문제는 군사적 해결 이외의 해결 방법은 없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인식하여, 독도문제가 양국 관계의 경색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대일 전략과는 별도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증명하는 다양한 정보발신이 중요함. 또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의 수집, 연구 촉진도 필요함.
- 동북아 역사재단 등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외교통상부 및 관련 부서도 이러한 연구지원 및 논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또한 일본의 다양한 세력에 의한 독도문제 도발에 일일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일본 측의 다양한 도발에 걸 맞는 대응 메뉴얼의 준비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한일의 미래담론에는 북한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도 공유해야 함. 북핵실험 및 천안함 사태 등으로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해져 있으나,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 이후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간의 직접접촉 및 협상도 중요하지만, 북미대화 및 북일대화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형태의 대북정책도 중요함. 우리가 북미대화나 북일대화에 지장할 초래할 외교적 선택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임.
- 북일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일본 총리의 방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총리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북일관계 해빙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북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으며, 한일 간의 공동성명에서 남북한과 일본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것임.
- 이와 동시에 한·미·일에 의한 다자간 대북 협력체인 6자회담과 같은 다국적 협력의 틀을 유지하여,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 하여금 북일 수교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한일의 미래담론에는
북한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도 공유해야 하며,
다자간 대북 협력체인
6자회담과 같은 다국적
협력의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학술적 교류의
획기적 확대는 양국 간의
미래담론 실천의 중요한
주체가 될 것이며,
한일이 공유하는 미래
담론의 실천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될 것임*

나. 중단기적인 한일 2국 간 협력방안 모색

- 미래담론의 공유와 함께, 한일은 2국 간 협력을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설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1) 한일 간의 중층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교류(시민, 학술, 지역 등)
 - 먼저, 한일 시민에 의한 공통된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축을 지원해야 함. 한일 간의 시민사회는 개별적으로 발전, 확장되고 있으나, 시민사회 간의 교류는 매우 미약하며, 특히 양국의 시민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의 창출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양국의 시민사회가 공동의 가치를 모색하며 이를 공유하는 공동 시민의식의 함양이 절실함.
 -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양국 간의 미래담론 실천의 중요한 주체가 될 것이며, 한일이 공유하는 미래담론의 실천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될 것임. 한일 간의 중층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교류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하기보다 시민사회 차원으로부터의 협력과 개선이 중요하며, 시민사회의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이와 동시에 학술적 교류의 획기적 확대도 중요함. 한일 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학술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과 질 모두 빈약하며 일회적 이벤트로 끝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다 장기적이고 중층적인 한일 공동연구 조직의 발족 및 운영이 요구됨.
 - 양국의 정부기관, 혹은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도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판단됨. 따라서 정부기관이 후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술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지자체 간의 교류확대를 위한 양국 정부의 지원도 중요함. 현재 지자체 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 협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지자체 간의 교류가 체계적,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학술교류 지원과 마찬가지로 양국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정부 차원에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2) 문화협력: 한일 문화교류와 새로운 문화상품의 공동 창조

- 한일 간의 문화교류와 문화협력은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이며, 기존의 인프라도 일정한 정도 구축되어 있는 상황임.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분야의 특성화를 통해 집중지원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임.
- 예를 들면, 한류 엑스포와 같은 문화/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한 일에 의한 합작영화, 드라마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한류와 일류를 하나로 묶어 내는 새로운 장르의 개발이 가능할 것임. 또한 한일의 기술력과 공동문화를 결합하면, 세계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상품의 창조도 가능한 상황이므로, 양국이 기술과 콘텐츠, 자본을 교류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한 협력방안이 될 것임

3) 역사인식 공유: 연구 및 출판 분야의 교류

- 한일 간의 역사인식 마찰과 과거사 문제는 양국 간의 긴장과 갈등의 근원이며, 이의 해소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함. 양국 간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이를 덮어 놓고 넘어가는 정책선택은 장기적으로 유익하지 못함. 따라서 양국 간의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양국이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는 기존의 한·중·일 역사교과서의 공동 집필 노력을 계속하며, 청소년에 대한 공동 역사교육의 확대와 시민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해 국가와 민족주의의 테두리를 넘은 역사인식의 공유가 필요함.⁶⁾

다.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실천적 협력⁷⁾

1) 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의 지속

- 한일 간의 안보협력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증진되었지만, 아직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남겨 두고 있음. 한일 간에 해상 공동 훈련 등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평화목적의 재난 구호훈련이며, 실질적인 군사협력의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음.
- 현재의 한일 간의 군사교류를 군사협력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양국

한일 간의 문화교류와 문화협력은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인 반면, 한일 간의 역사인식 마찰과 과거사 문제는 양국 간의 긴장과 갈등의 근원이며, 이의 해소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함

21세기의 한일이**지향해야 할****안보협력은 한·미·일****혹은 한·중·일****협력 등 지역협력에서****국제협력으로 발전할****수 있는 방향으로****설정해야 함**

간의 신뢰구축, 동북아 정세의 안정 등 사전의 환경정비가 필요함과 동시에 새로운 영역으로 협력대상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음.

- 전통적 안보분야에서 한일이 향후도 지속, 발전시켜야 할 협력분야는 군 인사 및 군사교류, 부대 간 교류, 유학생 교류 및 연구교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협력, 동북아 평화질서 유지에 대한 협력, 한·미·일 협력의 유지, 강화 등이 될 것임.

- 한일이 군사동맹을 체결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면, 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은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2)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의 모색

- 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유지,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협력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해야 함. 21세기의 한일이 지향해야 할 안보협력은 한·미·일 혹은 한·중·일 협력 등 지역협력에서 국제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 이를 위해 우선 한·미·일 협력이 중심이 되는 국제협력을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

- 한일이 동아시아 안전보장의 중요한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군사교류 차원의 협력관계를 넘어 실질적 군사협력이 가능한 차원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기존의 2국 간 협력을 지역협력, 글로벌협력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즉, 한일은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과 2국 간 협력중심의 냉전형 안보협력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 지역협력의 성격을 강화해 나가는 새로운 안보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한일 안보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임.

- 먼저, 지금까지 한일이 협력해 온 현안문제에 대한 협력, 교류에 더해, 예방외교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보협력이 추구되어야 함. 특히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뿐만이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함.

- 또한 한일 간의 2국 간 협력으로 그치는 협력이 아니라, 지역협력, 국제협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를 들면 재해, 재난시의 긴

금구조 활동이나 해양에서의 불법행위 퇴치 등의 협력이 이에 해당됨.

- 다음으로 위협의 해소뿐만이 아니라 위협의 예방,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함. 한일 간의 해양수송로의 공동방위와 같은 협력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협력을 넘어서, 미래의 안전보장에도 직결되는 협력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한일 간의 협력이 한·미·일 혹은 한·중·일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함. 한·중·일 혹은 한·미·일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은 한국정부가 21세기 외교안보전략으로 구상 중인 「성숙한 세계국가」 건설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와도 직결되며, 한일관계에 관해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다양화해 나가는 전략과도 일치함.⁸⁾
- 이상을 정리하면, 21세기 한일 안보협력은, 전통적 안보협력에 더하여,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 대테러 국제협력(사이버테러 포함), 해양에서의 불법행위 방지(공동 치안유지)와 해양수송로(SLOC) 공동방위 등의 해양에서의 협력, 재해 및 재난, 환경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함.

라. 한일협력을 통한 국제협력의 모색

- 한일의 2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일협력을 국제 협력, 지역협력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인적교류협력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시야에 넣은 협력의 형태를 취해야 함.

1) 경제공동체 논의의 확산

- 최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은 경제공동체 구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한일 FTA 체결과 한·중·일 FTA 논의를 통해서 ‘한·중·일+ASEAN 경제공동체’ 혹은 ‘동아시아 공동경제권’에 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공동체 논의를 활성화해야 함.
- 고이즈미정부 출범 이후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축이나 ASEAN과의 포괄적 경제연대를 제안하는 등 지역의 광범위한 협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음. 이러한 일본의 변화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일본이 ASEAN을 리드하며 지역경제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이며, 이러한 일본의 전략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한일 FTA 체결과
한·중·일 FTA
논의를 통해서
‘한·중·일+ASEAN
경제공동체’ 혹은
‘동아시아 공동경제권’에
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공동체
논의를 활성화해야 함*

**탈냉전 이후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이나
다자간 안전보장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하면서,
미일동맹과 지역안보
협력을 병행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를
시작했음**

- 중국과의 지역 패권경쟁, 동아시아 경제권의 성장, 세계적인 지역통합의 움직임, 동아시아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같은 요인들은 일본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향후도 가속화시킬 것임.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구상에 양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⁹⁾

2) 안보협력(6자회담)

- 북미관계와 북일관계의 호전 가능성에 따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거론되고 있음.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한정적 목적의 임시 기구나, 북핵문제의 해결 이후에도 6자회담은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을 논의하는 유효한 안보협력기구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은 6자회담을 동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대화체로서 향후도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6자회담을 항구적 기구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동북아 안전보장대화의 재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탈냉전 이후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이나 다자간 안전보장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하면서, 미일동맹과 지역안보협력을 병행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를 시작했음. 일본은 안전보장의 핵심인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되, 그 위에서 한국, 호주 등과 개별적인 안전보장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6자회담과 같은 동아시아의 다자간 안전보장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음.
- 다시 말해 일본은 기존의 양자동맹 관계, 지역의 협력적 안전보장, 2국 간의 안전보장협력 등을 복합적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안전보장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한일 양국의 안보전략은 기본적으로 일치함. 따라서 ‘한일 안보 공동선언’ 등을 통하여 한일 안보협력을 지역협력, 국제협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됨.

3) 경제협력

- 경제협력 분야는 양국 정부가 실질적인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며, 한일 협력을 지역협력으로 발전시킬 가능성 역시 가장 높은 분야임. 예를 들어, 한일 중소기업 CEO 포럼을 동아시아 중소기업 CEO 포럼으로 발전, 운용할 수 있으며, 노동력의 교류와 전문적 기능인의 활용에 있어서도 국제협력 및 지역협력을 활용할 수 있음.

마. 기타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1) 인적 교류의 확대와 교육특구의 지정

-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나 지자체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학생, 지식인, 경제인,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교류가 확대되어야 함.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청소년과 학생 교류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생의 경우 학생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2년씩 공부하고 양국 대학의 학위를 받는 '2+2 학위 제도'나, 대마도 혹은 제주, 부산 등을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등의 한일 학생 교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2) 인터넷 교류의 장(場), 사이버 교류의 확대

- 최근 인터넷 공간은 양국 젊은이들의 중요한 삶의 공간이 되어 있음.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한일이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함. 또한 일본어를 모르는 한국인이나,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인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국의 사이트를 웹 서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한일 자동번역 웹 서비스의 확대도 필요함.

3) 스포츠 교류

- 스포츠는 양국 국민을 민족적 감정으로 대립시키기도 하지만, 스포츠를 통해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질 수도 있음.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의 공동 개최와 같은 이벤트는 양국 국민들에게 동일 의식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함.
- 또한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를 중심으로 한 프로리그 교류의 확대나 공동의 리그 창설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만함.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4. 결론: 협력의 전망

- 한일은 새로운 21세기 협력관계를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음. 21세기를 20세기와 같은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협력을 만들어 가는 신시대로 장식할 것인가는 향후 몇 년 간의 한일관계의 재정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21세기 한일관계를
열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는
한일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담론의 형성이
가장 중요할 것임**

으로 판단됨.

- 특히 2010년은 한일 양국에게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므로, 한일은 1998년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을 뛰어넘는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점임.
- 21세기 한일관계를 열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는 한일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담론의 형성이 가장 중요할 것임. 양국은 미래담론의 공유를 통해 함께 이익을 나누고, 함께 가는 21세기를 그릴 수 있음.
-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일관계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양국이 새롭게 고안하여야 하며, 양국 간의 2국 간 협력을 지역협력 및 국제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 대상의 발굴도 필요함.
- 1998년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좋은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 그 중에서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실천이 미진한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양국이 실천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함.
- 21세기 한일관계는 20세기 한일관계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제안과 실천이 뒤따라야 함. 지난 세기 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협력대상을 제시하고, 양국이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제안과 협력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이런 점에서 한일 양국이 지난 해 2월에 구성하여 추진해 온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가 주목받고 있음. 양국의 학계인사로 구성된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는 양국의 미래 공동비전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준비 중이고,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양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으로 제안될 가능성이 있음. 21세기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의 밑그림이 될 수 있는 공동제안이 이루어져, 1998년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小淵) 전 총리가 합의한 ‘신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넘어선 실천적인 미래 구상을 양국이 공유하기를 기대함.

편집: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고정선(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국문에디터: 강길효(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주석

- 1) 외교통상부 『김대중 대통령 일본 공식방문 결과, 1998년 10월 7일-10일』. 행동계획(액션플랜)의 실천방향에 대해서는 김영작 외 『21세기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액션플랜>의 바람직한 실천방향에 관한 연구』(1999년 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 특별정책과제 결과보고서, 2001) 참고.
- 2) 이명박 정부 초기의 대일정책 및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전진호 “한일관계와 이명박 정부의 대일정책”(『한일군사문화연구』제8집, 2009) 참조.
- 3)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전진호 “실용주의 대일외교: 구동존이(求同存異)인가, 동상이몽(同床異夢)인가,”(미래전략연구원, 2008) 참조.
- 4) 일본의 한국병합 100년이 되는 2010년은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담론을 천명할 수 있는 적기이며, 실제로 양국 정부 간에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 5) 한일관계의 현안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전진호 “21세기 한일관계의 현안과 전망,”(『한일군사문화연구』 제3집, 2005) 참조.
- 6)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편 『미래를 여는 역사』(2005).
- 7) 전진호 “한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모색”(『일본연구』 제13집, 2010).
- 8) 청와대 『성숙한 세계국가』(2009).
- 9) 전진호 “일본의 동아시아 구상과 일본외교”(『일본근대학연구』 제27집, 20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